

# 국표원,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프로그램'으로 수출규제 대응

美·EU 등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적절 대응 못하는 경우 불이익 생겨  
기술적 고난이도 내용... 작성 어려워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실무교육 실시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제품 위해 리  
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을 돕는 프로그  
램이 개발돼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  
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  
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  
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  
폼에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중  
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  
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  
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제품 관련 사고 발생 보  
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  
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를 사  
실상 강제하고 있고, EU는 신기술 제  
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와 수리나 환불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 홈페이지.

등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  
를 내년 12월부터 도입한다.

호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제품 리콜  
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  
성해 제출토록 했고, 일본은 지난 2011  
년부터 기업의 제품 사고 발생 사실 보  
고,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 결  
정 시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하  
고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  
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 시나리오, 사고 확률, 위해저감대  
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작성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  
내외 제품 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  
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  
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  
일, 12월 7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  
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  
고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  
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안전보건공, 자체 캐릭터로 영상뉴스 전파

'안젤이', 아나운서로 재탄생

안전보건공단이 5일 지난해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개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업체인 네  
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  
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  
로 재탄생시켜 영상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  
상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젤이는 '안전제  
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천사 '엔젤'  
이 합쳐진 캐릭터로 지난 1999년 탄생  
했다.

현재 공단은 산재예방관련 보도·홍  
보자료를 문서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중장년 세대도 온라인 영상매  
체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안젤이'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온라인 유통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  
해 글자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최신기  
술(Text to Video)을 활용한 안전보건  
뉴스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다. 공  
단은 "영상화된 자료는 음성으로 읽어  
주기 때문에 문서형태 보다 이해가 쉽  
고 어려운 개념도 그림으로 설명이 가  
능하다"며 "안전보건 콘텐츠 시청자들  
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추가비용, 시공사 부담"... 부당특약 덜미

공정위,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  
추가공사·돌발상황 추가비용 미정산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 해

공사 위탁계약을 하며 추가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종합 건설사가 작발돼 공정거  
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전  
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  
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흥화는 1971년 설립한 종합 건설사  
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116억  
8600만원, 지난해 매출액은 1685억  
8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흥화는 2019년 7  
월경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  
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 상  
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  
한 특약을 설정했다.

흥화가 설정한 부당한 특약을 보면,  
'도면에 누락돼 있으나 기능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경우 필요시 본  
공사에 포함되며, 추가 부분에 대해 정  
산을 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 상 돌관  
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흥화는 또 2019년 7월 ~ 2020년 8월  
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  
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  
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않았다.

이와 관련,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  
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  
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  
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  
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  
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 공  
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  
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  
에서 그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  
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후보 지역 물색

유일하게 대구시만 후보 없어

환경부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후보 지역 물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  
으로 이달 7일~14일 면담을 실시할 예  
정이다.

환경부는 5일 "이번 면담 조사는 지자  
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  
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살펴보게 된

다"며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  
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  
조로 전환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  
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조성  
할 도시라고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84개 광

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  
성사업' 참여의향을 제출했다.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광역시만 유일  
하게 의향서 제출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  
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 98곳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  
하게 된다.

예비 후보지는 오는 11월 말까지 선  
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  
진전략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내  
년 9월에 최종 대상 지역 10곳을 선정하  
기 위한 과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가스공,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박차'

분할 납부 지원·요금 감면 나서

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선다.

6일 가스공사는 일반용 또는 업무난  
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10월~내년 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  
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  
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  
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  
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  
록 최대 59만 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  
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



한국가스공사는 6일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  
한다.

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또,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  
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  
으로 확대한다. /허정윤 기자 zekova@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총 1만2900명... 탄력배정분 활용

고용노동부가 6일 고용허가제 외국  
인근로자(E-9)와 관련해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  
혔다. 허가서 발급규모는 총 1만2000여  
명으로, 이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는 이달 20~30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조업 5000명과 조선업 400명, 농축산  
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000여명)을 적극 활  
용할 예정"이라며 "업종 구분 없이 연  
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  
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  
용한도 2배 확대에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  
-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명) 등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상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4회차 발급에 연이  
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  
속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  
인 구인노력(농축산업 7일, 그 외 업  
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